

광남시론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정치학 박사



지난 10월말 경주APEC에서 대한민국이 향후 세계중 삼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메가톤급 소식들이 있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공개요청 하자, 불과 하루만에 트럼프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화답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단군 이래로 대한민국이 경제와 안보부분을 중심으로 크게 도약해 선진 강대국으로 넘어 가는 디딤돌로서 역사적인 쾌거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핵추진 잠수함 승인의 의미는 한반도 및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의 변화로 인해 한국 군사력의 질적 도약 및 자주국방 능력 강화이다. 이는 기존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극복하는 은밀하고 신속한 작전 능력, 장기간 잠항 및 원거리 작전 능력 확보를 통해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에 기여하고,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덜어주며,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30년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했으나 미국에 의해 지금까지 계속 좌절되었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을 승인하면서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바리쿠다(4000t) 모델로 3척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202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NPT 탈퇴와 2차 핵위기가

게임 체인저, 핵추진 잠수함 승인의 의미

고조되는 시기였으므로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통보와 핵개발 의혹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SLBM등 북핵 위협대응 필요성으로 핵추진 잠수함 시대가 되었다며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할 의사를 밝히고 미국과 이 문제를 갖고 논의했으나 핵추진 잠수함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때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북핵위험에 대응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3월 핵추진 잠수함 건조현장을 공개했고 이 잠수함은 2020년대 후반 이후에 완성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SSBN) 개발도 추진중이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서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체계이다.

둘째, 최악의 경우 중·일전쟁이 일박한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 등의 주변국에 대해 잠재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반도 주변의 독도와 이어도 등 해양 영유권 분쟁이 있는 일본, 중국과의 갈등에서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데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대규모의 해군력을 갖추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을 통한 비대칭적 전략 자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 발전 및 전략적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하면 한반도 동해와 서해 방어를 이 잠수함을 활용하면 미군의 군사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한·미동맹 아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자산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존재 자체만으로도 대중국제가 될 수 있다.

넷째,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원자로 설

계 및 군사기술 습득 등 첨단기술을 확보해 국방기술을 한단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섯째, 핵추진 잠수함은 자연스럽게 핵 억지력 유지가 가능하다. 유사시 핵추진 잠수함은 주요 군사시설이 공격 받았을 때도 먼바다에서 은밀하게 대응할 수 있어 핵 억지력 유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한다해도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 핵공격을 피할뿐만 아니라 맞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수 있다.

핵잠수함은 군사적 억제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원자력공학등 첨단기술이 결합되어야 하며 국가적 연구 인프라와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함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의 재개정을 위해 미국 의회의 승인과 함께 한미 양국의 특별협정 체결 등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오랜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므로 미국의 차기정부에서도 일관된 추진이 가능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요즈음 대한민국은 경사가 겹치고 있다. 외교전체 이재명 대통령 등장과 함께 지난 10월 경주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연속적으로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계 반도체 점유율 70%를 바탕으로 GPU 26만장이 공급 되며 AI 3대강국이 가능해졌으며, 전 세계에서 호평받는 KF21 보라매 전투기를 비롯한 K-방산제품들, 미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책임질 정도로 탁월한 한국의 선박 제조 기술, 중동과 유럽의 UAE, 체코에서 세계 최고로 각광받는 한국형 원자력 발전 기술, 최근 전남 고흥에서 발사 성공한 제4차 누리호, 그리고 케데헌을 비롯해 K-문화가 전 세계를 꾸준히 강타하고 있다. 여기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은 세계 초강대국을 향해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무섭게 선도하고 있다. 이제 한민족에게 남은 한가지 퍼즐은 한반도 통일이다.

기고

오길영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악취관리과장



최근 환경문제는 단순한 규제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첨단기술과 협업을 통한 해결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 미세먼지, 악취 등 복합적인 환경 이슈는 기술적 접근 없이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 동시에 환경행정의 주체 역시 행정기관 단독에서 벗어나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중 거버넌스 방식이 요구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수질, 대기, 소음, 악취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연구·조사·감시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여수산단을 대상으로 GIS 기반 악취지도 작성, 악취 민원 다발 지역의 복합악취 원인분석,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악취관리지역 순회진단, 그리고 악취전문 연구기관·센터 등과의 협업 등은 주목받는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단지 행정적 보고나 공공 내 순환에 머무른다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연구원이 축적한 측정 기술, 분석 프로토콜, 배출·방지 시설 진단역량 등은 현장 실증 기반의 고급 정보다. 특정 산업군의 공정 특성과 연계된 악취 배출 패턴, 악취물질의 실시간 변화 분석은 환경솔루션 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된다. 예컨대, 연구원에서 보유한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특성 자료는 개별 사업

악취관리, 공공의 과학과 민간의 실행이 답이다

장이 공정에 맞는 탈취설비를 설계하거나 사후 성능 검증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다만 현실에서는 공동연구나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장의 현장 참여가 미온적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인력과 예산 부담,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험은 공공과 민간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참여 유인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기술자금이 민간에 활발히 이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의 개방적 자세가 우선임은 분명하다.

공공기관은 대기질, 수질, 악취 등 방대한 환경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내부 활용에 그친다. 민간에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마련된다면 환경 개선은 물론 산업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악취 자동측정망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하거나 위치 기반 악취 민감도 지수를 산정해 민원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문제는 데이터 표준화, 실시간 접근성, 개인과 사업장 정보보호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민간 업체와 협력해 민원 대응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지만 통합된 시스템 구축은 아직 미비하다. 연구원이 중간 허브로서 데이터를 수집·정제하고 민간과 실질적 협업을 추진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공연구기관은 ‘측정-분석-보고’, 민간은 ‘설계-시공-사후관리’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 공동의 솔루션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악취와 같은 감각공해 문제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 현장 운용성, 법적 규제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주요 악취배출시설과 공동으로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실측자료와 주민 설문 등을 토대로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현장-기술-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 내 신뢰도도 향상시킨다. 민간 입장에서든 공공기관과의 공동연구는 대외 신뢰성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나아가 대학, 기술사사무소, 환경컨설팅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탈취효율 향상 기술이나 유지관리 개선, 디지털 예측모델 개발 같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광역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악취관리과를 운영하며, 시군과의 유기적인 조사 네트워크, 실시간 데이터 측정 인프라, 전문 연구 인력 등 다양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산을 단지 행정 목적에 머물기보다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솔루션 허브’로 확장될 수 있다. 냄새는 감각이지만 그 해결은 과학이다. 수치와 데이터 그리고 기술은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도구다. 그러나 그 도구가 제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민간 실행이 함께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의 영역을 넘어 함께 움직일 때 정책이 책상에서 현장으로 내려온다. 공공이 ‘문을 열고’, 민간이 ‘손을 내밀며’ 정책이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변화로 이어질기 때문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은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원 사업에 응모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상점이 지정 이전에는 대다수 상인은 뜻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회 회장은 직접 자영업자를 만나 골목형상점가 혜택을 적극 알리며 가입을 유도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골목 축제, 시설 개선 등으로 이어졌고, 상인과 주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골목형상점가 상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친절 교육, 위생 관리 강화 등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와 상권 활성화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상인들의 노력이 모여 ‘경쟁력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역 특색을 갖춘 골목상권’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본다.

사설

고객정보유출사고, 강력한 대책 마련할 때

편의점, 흡소핑,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가리지 않고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 규모만 고객 계정 약 3370만건이나 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에 불안에 떨고 있다.

아직까지 쿠팡 측이 밝힌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지만 경찰 수사에 따라 계좌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고객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쿠팡이 정보 보안 문제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배달원 개인정보 등의 유출 사고로 세 차례에 걸쳐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다른 유통업체들도 해킹과 이로 인한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편의점 업체인 GS리테일은 지난 1월과 2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9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6월에는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 역시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 역시 고객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을 고객들에게 알렸다.

이뿐 아니라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도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큰 홍역을 치렀다.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정보의 누출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융 사기, 신변 도용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경우, 유출 사고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개인 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 ‘골목형 상점가’ 됐는데 혜택 사라져

을 한해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단연 ‘골목형 상점가’다.

이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골목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말하는데 광주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를 제외한 4개구가 관내 전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정도로 ‘대세’가 된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광주 서구가 선도했다.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행정구역 전체에 121개, 1만1400여곳의 점포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것이다.

이어 북구가 지난 9월 선포식을 열고 전국 최다인 123개소 1만 3440점포, 이어 남구도 지역 내 전역에 82개소 6660개 점포를 각각 지정했다.

또 동구도 최근 선포식을 열고 전 지역 총 73개소 4890점포를 지정했고 광산구도 을 한해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 119곳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완료됐다.

광주 지자체들이 골목형 상점가 확대에 적극 나서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입장에서 잠재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자에게 10%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은누리 상품권’만한 것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행하는 은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해 고객 유입·매출 증대, 홍보, 결제 편의, 환급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 서구의 경우 을 한해 524억원 규모의 은누리 상품권을 유통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3배나 늘어난 수치로 주민들의 체감 절감액만 해도 100억원을 넘어 선다고 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상품권 혜택이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골목형 상점가 확대와 함께 은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크게 늘어난 광주는 연말을 앞두고 상품권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예산소진으로 지난날 11일부터 할인·환급혜택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내년 은누리 상품권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3907억원보다 증액된 4579억원을 편성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년 내내 상품권 할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수첩

골목형상점가의 경쟁력

송태영

경제부 차장대우



과거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은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야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가능했다.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를 조정하며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에 힘을 보탰고, 이에 수많은 자영업자와 상인들은 화답하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힘을 보탰다.

광주 서구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전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단행하며 관심을 일으켰다. 이어 북구가 9월 전국 최다 규모인 123개소(1만3400여점포)를 일괄 지정했고, 동구도 11월 전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광주 전역이 ‘골목형상점가 도시’로 확장되는 변화를 이뤘어냈다. 전남 22개 시·군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는 추세다.

올해 본보의 ‘골목상권을 살리기’라는 기획시리즈를 취재하면서 광주·전남의 골목형상점가 회장을 만났다.

골목형상점가 회장과 상인들은 아직 매출과 유동 인구의 뚜렷한 증가는 없지만, 골목 경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골목형상점가는 현금보다 5~10%